

| 기획취재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이뤄져야 한다

이원복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주무관 인터뷰

박석모 <참여와혁신> 기획이사 · 이세종 전문위원

중앙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더욱 어렵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 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험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충청남도가 지난 9월 18일 열린 ‘2018년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특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지요?

“충청남도가 지역 중심의 노동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통합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성을 비교하고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질 개선정책 등 다양한 시도를 좋게 보아주신 것 같아요. 특히 2017년에 고용률 61.3%로 전국 4위를 달성하면서 충청남도가 고용친화적인 모범적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부분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양적 팽창 위주의 일자리정책이 아니라 질까지 고려한 정책을 펴는 것, 청년이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책을 시

군과 같이 묶어서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요.”

충청남도는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충청남도 고용실천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크게 4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형태로서 충남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이 다시 찾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은 농업과 공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산업화된 지역과 농업지역의 권역별 불균형이 큼니다. 이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사업을 끌어내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만들어졌던 노동정책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실행력을 가지면서 노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어서 노동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가 2017년에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정책과에 일자리팀과 노사협력팀의 2개 팀이 있었는데, 2015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확장했습니다. 일자리 쪽은 기존에 일자리사업에 들어갔던 적지 않은 예산에 더해 중앙정부의 일자리예산을 받아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 쪽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예산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조금씩 더 올리는 형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확대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 하면서 예산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발전이 우선이어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노동권익, 노동친화적 부분에는 예산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추동력으로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사업을 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과도한 센터 설립으로 인식한다든가, 외국인근로자 보호가 농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의회에 형성돼 있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인데, 당장 기업이 고용해야만 일자리가 느는 것이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에 수립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 노동정책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양대 노총 각각과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는데, 2015년 초에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충남에 맞는 노동정책이 뭐가 있느냐고 제기한 거죠. 노동친화적인 충남을 지향하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해 5월에 일자리정책토론회를 진행했어요.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기관들이 우리 수준을 분석해서 우리 걸 만들어보자고 합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을 만들어냈죠.

실무위원회에서는 충남 노동정책에 대한 마인드, 핵심가치를 뭘로 할 건지 논의했고, 노동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때 중심이 됐던 화두가 지자체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려면 나부터 잘해야 한다는 정신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모태가 됐죠. 그래서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정책의 기본 비전으로 제시되고, 그 아래 3대 정책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의 존중을 위한 기반 확대를 한 축으로 하고, 생활임금 시행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이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를 민간에 확장시키는 것을 또 한 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노동존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까지 3가지 정책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6개 노동정책, 16개 과제, 48개 단위과제로까지 형성되는 거죠.”

충청남도에는 노동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요?

“충청남도가 2015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만들고, 다음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만들고, 이걸 지원하는 노동정책협의회를 만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제정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이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노동정책협의회를 두게 된 겁니다. 이걸 구성할 때 실무단위에서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아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민주노총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와는 별개로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기구로서 노동정책협의회를 두기로 한 겁니다. 그 속에서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관 협치를 통해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걸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노동정책협의회에서 5년에 한 번씩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매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세우고, 중점사업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2017년에는 기반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잡아서 제도를 만들었고, 올해는 실행력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해서 노동권익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정책을 원활히 펴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야 할 텐데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 협치로 보완해야 합니다. 충남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단체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과 지역에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 인프라가 없다는 건 지역단체나 전국단위 단체의 지부가 전문성, 책임성, 장악력 부분에서 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충남의 경우 사용자단체가 여러 갈래로 분리돼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충남이 잘하는 건 토론회 등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넓히는 거라고 봅니다. 만남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능력도 커지죠. 당장 하나의 합의된 아젠다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청남도도 노동포럼이나 백인토론회를 통해서 대화의 단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도 사회적 거버넌스 확장에 중심을 두고 토론회나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넓혀가려고 합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민주노총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노총과 함께 가기 위해 노동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설명 드렸습니다. 추세로 보면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인위적으로 개편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충청남도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할 의제와 노동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할 의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이 잘돼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지역에서는 중앙의 영향을 100% 받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만 해도 중앙에서 풀리지 않으면 지역에서도 풀리지 않죠. 중앙의 사회적 대화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아젠다로 보면 중앙 따로 지역 따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과 지역의 아젠다가 서로 어우러져야 해요. 중앙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이 지역과 결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테이블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11월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노동정책의 핵심 테마를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해왔던 성과를 어떻

게 받아서 지역 사회적 대화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계승이 없다면 자칫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 경사노위의 지역조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의제 몇 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게 많았어요.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역도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역의 논의 의제가 그 몇 가지로 국한되어 버리고,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의 하부기구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젠다를 지역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죠. 지역의 인프라나 수준이 다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적 대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